



[산업]
구현모 KT 대표
“비대면시대,
일시적 현상 아닌 변화”
06



Life

[라이프]
CJ올리브영
‘즐거운 동행’
매출 100억
L1



종로에 ‘재난 컨트롤타워’ 세운다

‘소방합동청사’ 2024년 준공
소방재난본부·종합방재센터 통합
서울 전역 재난현장 신속 지휘 기능

서울시는 도심 한복판에 시 전역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소방합동청사’를 짓는다고 21일 밝혔다.

소방합동청사는 현재 종로소방서 자리에 지상 12층, 지하 4층, 연면적 1만 7789㎡ 규모로 들어선다. 이달 중 현상 설계 공도를 시작해 내년 12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가 2024년 10월 준공한다는 목표다.

청사에는 119 신고 접수부터 현장 활동 지휘 통제까지 통합 관리하는 ‘종합방재센터’와 화재 예방·진압 등 소방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재난본부’가 배치되고, 종로소방서도 입주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종합방재센터와 소방재난본부는 중구 예장동 남산 자락에 별도 청사로 분리돼 있어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긴급회의를 여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종로소방서 청사는 1978년 준공돼 노후했고 공간이 좁아 대형 소방 차량 주차가 어려우며 사무 공간이 부족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해 개선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시는 소방재난본부와 종합방재센터를 도심에 통합 배치함으로써 서울 전역의 재난 현장 지휘를 더욱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로는 서울 전역 어디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4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

시는 당초 119특수구조단, 서울소방학교가 있는 은평구 ‘소방행정타운’에 두 기관을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사고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의 30%가 광화문 도심에 있고 30층 이상 고층 건물의 66%가 광화문과 강남권에 있는 점을 고려해 종로구 이전

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시 중심부에 소방본부가 있는 뉴욕이나 도쿄 같은 세계 주요 도시의 사례도 참고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청사 설계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각종 편의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소방합동청사 건립은 ‘소방은 안전서울의 보루’라는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한다”며 “그동안 재난·사고 컨트롤 기능을 분담해 온 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를 도시 한가운데 통합 배치함으로써 대형화·복합화하는 재난·사고에 1초라도 더 빨리 대응하고 더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 재난긴급생활비 223만 가구 신청

1·2인가구 시 예상보다 접수 많아
가장 많은 사용처는 ‘생계형’ 소비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접수 결과 당초 예상의 1.5배인 223만 가구가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전체 신청 가구의 약 75%인 164만 가구가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소득기준 초과 등 사유로 제외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된다.

시는 19일까지 125만 가구에 4258억 원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신청자 중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이에게 늦어도 29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예상보다 신청 가구 수가 훨씬 많았던 것은 1·2인가구의 신청이 전망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급 대상 가구의 비율을 1인가구 32.0%, 2인가구 25.5%, 3인가구 21.0%, 4인가구 16.6%, 5인 이상 가구

4.9%로 내다봤으나,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는 각각 43.1%, 26.8%, 15.3%, 11.3%, 3.4%로 나왔다. 1인가구와 2인가구는 시의 예상보다 많았고, 3인 이상 가구는 적었다.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가구 규모가 작은 경향이 있고, 중위소득 이하에 많은 가구가 밀집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 가족이 아니면서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된 동거인 약 8만 5000명이 별도 가구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영향을 줬다고 시는 분석했다.

시가 이달 17일까지 재난긴급생활비 사용액 2107억원의 용처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생계형’ 소비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슈퍼마켓·편의점 등)이 44.7%, 요식(음식점)이 22.0%, 식료품(농수산물·정육점 등)이 12.7%를 차지해, 이 3개 업종의 사용액이 전체의 79%에 달했다. /김현정 기자

노원구 도서관, 마을공동체 활성화 거점으로

지식문화 인프라 체계적 활용 도와

서울 노원구는 도서관을 마을 공동체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민들이 지역 내 잘 갖춰진 도서관의 지식문화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사업 형식으로 진행한다.

도서관 지식문화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는 5인 이상 모임이 응모할 수 있다. 대표 제안자와 모임 구성원의 과반수가 노원 주민이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 모임의 대표는 성인이어야 한다.

활동기간은 올해 11월까지다. 구는 ‘씨앗기’와 ‘새싹기’로 구분해 모집한다. 씨앗기는 이웃간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며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웃과 함께 책을



노원구청. /노원구

읽고 토론하는 활동을 주로 하게 된다. 새싹기는 본격적인 마을 활동을 펼치는 단계다. 참가자들은 이웃과 함께 지적 호기심을 채우며 성장하는 배움의 장을 운영하거나 마을과 이웃의 이야기를 담은 지역정보를 자료 형태로 만들어 공유하게 된다.

모임 활동을 희망하는 주민은 이달 29일까지 관할 도서관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삼성병원 집단감염 역학조사 확대

역학조사 대상 기간 2주 전까지 추적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진 집단감염이 발생한 삼성서울병원과 관련해 역학조사 대상 기간을 늘려 감염경로를 파악하기로 했다.

나백주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1일 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조사 대상 일자를 확대해 전국번호 11088번 환자의 5월 7일 동선부터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지난 18일 간호사 1명의 감염이 처음 확인된 이후 19일 3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11088번은 추가 확진자 3명 중 1명이다. 이 환자는 이달 9일 지인들과 강남역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21일 서울 중구 시청에서 삼성서울병원 및 영등포 전문학교 등 이태원발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정례브리핑을 갖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일대 주점 등을 방문했는데, 당시 일행 중 충남 서산과 경기 안양 거주자 등 2명이 지난 20일 확진됐다.

날짜별로 보면 9일 11088번 간호사 확진자와 지인들의 주점 방문, 18일 삼

성서울병원 다른 간호사 1명 확진, 19일 11088번 양성 판정, 20일 11088번 지인 2명 확진 순이다.

나백주 방역통제관은 “11088번은 무증상 상태였다”며 모임이 있었던 9일의 이틀 전인 지난 7일로 조사 대상 일자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1088번이 삼성서울병원의) 최초 감염 사례인지는 조금 더 파악해 봐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최초 감염이 맞다고) 추정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런 전제하에서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삼성서울병원과 관련해 총 1400여명을 검사 대상으로 설정하고 전수검사를 시행 중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아리수 ‘비닐 라벨’ 없앤다

비닐 분리배출·환경오염 요인 줄여

서울시는 이달부터 ‘아리수’의 페트병에 비닐 라벨을 부착하지 않는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아리수 페트병에는 비닐 라벨이 붙어 있어 분리배출과 재활용에 불편하며 환경 오염의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연내 90%가 자연분해되는 소

재를 사용한 ‘생분해성 병물 아리수’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생분해성 병은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되며, 매립될 경우에도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다.

서울시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병물 아리수 생산량을 줄이고, 작년부터는 단수·재난지역 비상급수용으로만 공급·비축하고 있다. 시는 올해 병물 아리수 생산량



을 50만병으로 더 줄이기로 하고, 이 중 10만병을 생분해성 병에 담기로 했다.

서울시는 염소가 포함된 수돗물을 생분해성 병에 담기 장기보관할 경우 수질의 안정성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유통기한이

나 적정 보관 방법·온도 등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등을 서울물연구원이 테스트하도록 한 후 결과를 보고 생분해성 병의 확대 채택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7000만원 부과

서울시 시민신고제 2달간 1672건 접수

서울시는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시민신고제를 시행한 3월 12일부터 이달 17일까지 1672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 중 1294건에 총 6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됐으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378건은 일부 차량번호 식별 불가능, 촬영(위반)일시 미표시, 자전거전용차로 외 자전거도로(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우선도로 등) 신고 등에 해당했다.

신고를 분석한 결과 시민 이동량이 많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신고 건수가 1145건으로 전체의 68.5%에 달했고, 구간별로는 여의도 구간이 948건으

로 56.7%를 차지했다.

‘자전거전용차로’는 기존 차로의 일정 부분을 노면 표시 등으로 구분해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한 도로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시내 자전거전용차로는 총 48개 노선에 55.1km가 있다. 분리대나 경계석 등으로 차도·보도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자전거전용도로와 구분된다.

신고는 자전거전용차로임을 알 수 있는 노면표시, 위반 차량의 위치와 번호가 식별 가능한 사진·동영상을 촬영한 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하면 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4~6만원)가 부과된다. /김현정 기자